

제254회 임시국회
재정경제위원회

이 자료는 2005.6.15(수) 10:00이후부터
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주요 업무 현황

2005. 6. 15

재정경제부

目 次

I. 최근 경제동향

1. 세계경제 동향 / 1
2. 국내경제 동향 / 2
3. 평가 및 정책대응 방향 / 4

II. 주요 현안

1. 중소·벤처기업 대책 / 6
2. 종합투자계획의 추진 / 8
3.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 / 9
4. 제2차 에너지 세계개편 / 10
5. 재정운용시스템의 혁신 / 11
6. 금융허브 추진 / 12

[별첨] : 6월 임시국회 상정 예정 정부제출 법안 / 13

I. 最近 經濟動向

1. 세계경제 동향

□ 미국경제는 1분기 성장률(잠정치)이 속보치보다 0.4%p 높은 3.5%를 기록하여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

* GDP(전기비 연율, IMF) : (04)4.4→(05^e)3.7,
(04.2/4)3.3→(3/4)4.0→(4/4)3.8→(05.1/4)3.5

○ 다만, 5월중 비농업부문 신규고용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고, 고유가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도 지속되는 모습

* 비농업 신규고용(전월비, 천명) : (05.1)124→(2)300→(3)122→(4)274→(5)78

* 소비자물가(전월비, %) : (04.12)0.0→(05.1)0.1→(2)0.4→(3)0.6→(4)0.5

□ 중국경제는 7분기 연속 9%대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

* GDP(전년동기비, IMF) : (03)9.3→(04)9.5→(05^e)8.5
(04.2/4)9.6→(3/4)9.1→(4/4)9.5→(05.1/4)9.4

○ 고정투자는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며, 소비자물가는 안정적인 모습

* 고정투자(전년동기비, %) : (04.3/4)29.9→(4/4)27.6→(05.1/4)25.8

* 소비자물가(%) : (04.3/4)5.3→(4/4)3.2→(05.1/4)2.8, (3)2.7→(4)1.8

□ 유로경제는 높은 실업률로 인한 내수부진으로 회복세가 지연

* GDP(전기비, IMF) : (04)2.0→(05^e)1.6, (04.3/4)0.3→(4/4)0.2→(05.1/4)0.5

* 실업률(%) : (04.3/4)8.9→(4/4)8.8→(05.1/4)8.8, (3)8.9→(4)8.9

□ 일본경제는 소비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확대되는 모습

* GDP(전기비, IMF) : (04)2.6→(05^e)0.8, (04.3/4)△0.3→(4/4)0.1→(05.1/4)1.3

* 가계소비지출(근로자가구, 전기비, %) : (04.4/4)△2.5→(05.1/4)1.0, (4)3.6

2. 국내경제 동향

□ 민간소비는 지난해 4/4분기중 7분기만에 보여진 증가세가 올해 1/4분기 들어 확대되었음

* 민간소비(전년동기비, %) : (04.2/4)△0.5→(3/4)△0.8→(4/4)0.6→(05.1/4)1.4

○ 도소매판매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, 특히 소매업은 전월에 이어 3%대의 증가세를 유지

* 도소매판매(%) : (04.4/4)△1.4→(05.1/4)△1.0, (05.2)△1.6→(3)1.4→(4)1.2

* 소매업(%) : (04.4/4)△1.6→(05.1/4)1.2, (05.2)6.2→(3)3.6→(4)3.2

○ 다만, 소비 심리는 최근 들어 다소 둔화되는 모습

* 소비자기대지수(통계청 100기준) : (05.1)90.3→(2)99.4→(3)102.2→(4)101.3→(5)99.2

□ 설비투자는 금년 1/4분기에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, 4월에는 운수장비 투자 부진으로 소폭의 감소세를 시현

* 설비투자 추계(%) : (04.4/4)0.1→(05.1/4)3.9, (05.2)△3.5→(3)1.4→(4)△0.3

□ 건설투자는 지난해 4/4분기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나, 최근의 건설수주 증가세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건설경기가 개선될 가능성

* 건설수주(%) : (04.3/4)△20.8→(4/4)28.8→(05.1/4)24.8→(4)29.1

* 건설투자(%) : (04.2/4)3.6→(3/4)1.3→(4/4)△3.4→(05.1/4)△2.9

□ 수출은 환율 등 대외적 부담요인에도 불구하고 금년 5월에 두 자리수 증가세를 회복

* 수출(억불) : (05.1)224.3→(2)204.0→(3)239.8→(4)229.7→(5)233.0

* 수출증가율(%) : (05.1)18.1→(2)6.6→(3)13.2→(4)6.9→(5)11.8

□ 산업생산은 4월중 수출증가세 둔화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낮아지는 반면, 서비스업활동은 최근의 내수회복 조짐을 반영하여 증가세가 다소 확대되는 모습

* 산업생산(%) : (04.4/4)6.7→(05.1/4)3.8, (05.2)△7.3→(3)4.9→(4)3.8

* 서비스업활동(%) : (04.4/4)△0.2→(05.1/4)0.7, (05.2)△0.5→(3)1.6→(4)1.8

□ 고용여건은 4월중 취업자수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점차 호전되는 모습

* 취업자 증감(전년동월 대비, 만명) : (05.1)14→(2)8→(3)21→(4)26

* 실업률(%) : (04.12)3.7→(05.1)3.9→(2)4.0→(3)3.9→(4)3.6

□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등에 힘입어 3% 초반의 안정세를 지속

* 소비자물가(%) : (04.12)3.0→(05.1)3.1→(2)3.3→(3)3.1→(4)3.1→(5)3.1

□ 주식시장은 4월중 고유가, 세계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했으나, 5월 이후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상승세로 전환

* 주가지수: (04.12말)859.9→(05.2말)1,011.3→(4말)911.3→(6.13)990.5

* 코스닥지수: (04.12말)380.3→(05.2말)498.3→(4말)424.4→(6.13)486.6

□ 금리는 연초 큰 폭 상승했으나 3월 이후 수급여건 개선 등으로 하향 안정세를 지속

* 국고채(3년,%) : (04.12말)3.28→(05.2.11)4.46→(4말)3.76→(6.13)3.80

□ 환율은 최근 달러화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체의 달러매도 등으로 1,010원을 중심으로 등락

* 원/달러 : (04.12말)1,035.1→(05.4말)997.1→(5말)1,007.7→(6.13)1,012.2

엔/달러 : (04.12말)103.14→(05.4말)106.12→(5말)107.99→(6.13)108.56

3. 평가 및 정책대응 방향

(1) 평가

- 1/4분기 성장률은 경기의 전환기적 상황을 반영하여 2.7%의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, 특히 경제 양극화로 인해 서민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
 - 그러나, 지난해 4/4분기와 비교하여 재고를 제외한 소비·투자·순수출 등 지출항목에서 성장에 대한 기여가 확대되는 등 성장의 내용은 개선되는 모습
 - * 작년 4/4분기의 경우 재고를 제외한 내수와 순수출의 성장 기여가 0.3%p에 불과하였으나, 금년 1/4분기에는 재고 감소 속에 2.7% 성장

< 지출 항목별 성장 기여도(%p) >

	04.1/4	2/4	3/4	4/4	05.1/4
· 내수	△0.8	2.5	1.4	2.7	0.9
- 민간소비	△0.8	△0.3	△0.4	0.3	0.7
- 건설투자	0.7	0.7	0.2	△0.7	△0.4
- 설비투자	0.0	0.7	0.7	0.3	0.3
- 재고투자	△1.0	0.9	0.6	2.6	△0.2
※ 내수(재고제외)	0.2	1.6	0.8	0.1	1.1
· 순수출	6.9	3.8	3.3	0.2	1.7
→ 성장률(%)	5.3	5.5	4.7	3.3	2.7

- 2/4분기에도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경기회복조짐이 이어질 전망
 - 그간의 구조조정으로 경제체질이 개선되고 있고, 소비 회복의 걸림돌이었던 가계부채 조정도 진전되고 있어 하반기로 갈수록 내수경기를 중심으로 경기회복속도가 잠재 성장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빨라질 것으로 기대
 - 다만, 1/4분기 실적과 아직 완만한 실물지표 회복속도 등을 고려할 때 금년중 연간 5% 성장 달성은 어려운 상황

(2) 정책대응 방향

- 정부는 경제가 조기에 회복되어 잠재 수준의 성장 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성장 촉진 노력을 강화
- 거시정책은 조기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기조를 견지
 - 재정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, 하반기 종합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추진
 - * 05년 BTL 총한도액(17개 분야 6.2조원), 사업별 한도액 국회제출(5.20)
 - 세제측면에서도 내수경기 회복을 지원*하고, 기금·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투자확대 방안을 강구
 - * 법인세율 2%p, 소득세율 1%p 既인하(05.1.1부터 시행)
 - 유가·환율 등 대외 요인과 금융·자산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하여 불안요인에 적극대응
- 미시적으로도 내수 활성화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부문별 대책을 병행 추진
 - 투자 활성화를 위해 토지구제 개혁 등 규제완화와 함께, 기업도시 건설, 대형 국책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
 - 임대주택 공급 확대,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, 새로운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충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
 -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, 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의 저변을 확대
- 이상의 내용들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담아 7월초 발표

II. 主要 懸案

1. 중소·벤처기업 대책

□ 추진배경

- '벤처기업 활성화 대책'(04.12.24) 이후 창업증가, 코스닥시장·벤처캐피탈 활성화 등 벤처업계의 역동성이 회복
 - * 벤처기업수(개소) : (04.11) 7,433 → (05.1) 8,030 → (3) 8,310 → (4) 8,525
 - * 창업투자회사의 벤처기업 투자실적 및 전망(05.1월, 중기청 조사)
(03실적) 6,118억 → (04실적) 5,639억 → (05전망) 9,830억 (74.3%증가)
- 그러나 창업초기기업은 재원조달, 인력수급, 수요기반 확충 등 안정적 성장을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

□ '벤처활성화 보완대책'의 주요내용

- 벤처캐피탈의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창업초기기업의 자금조달과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
 - 창업한지 7년이내인 기업에 대하여 경영지배목적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
 - * 현재는 최초 투자한 날로부터 6개월이상 지난기업에 대해 회생지원 인수, 합병을 위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최장 5년동안 허용
 - 펀드매니저가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펀드운영에 참여하는 '유한회사형 투자조합'을 시범결성

○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·융자 확대

- 창업초기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조합에 대해 모태펀드의 출자비율을 30%(일반조합)에서 최고 50%까지 우대
- 창업초기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(창투사)에 인센티브 부여
(예) 조합의 수익률이 연평균 10%를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의 모태펀드 귀속분중 일정분을 업무집행조합원(창투사)에 이전
- '개발·특허기술 사업화'에 대한 융자지원을 연간 1,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
- 기보의 기술이전보증지원, 폐자부활프로그램 등도 원활히 추진
- 벤처투자조합 추가결성 등 벤처기업 투자재원도 확대
* 국민연금 1,500억원, 산업은행 2,000억원, 기업은행 1,200억원, 농업전문펀드조성(06~07) 1,000억원

○ 창업보육센터지원 강화 등 창업보육기능을 활성화

- 05~10년간 자립운영이 가능한 창업보육센터 (보육실 면적 1,000평이상)를 현행 3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
- BT(생명공학)·NT(나노공학)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창업보육센터의 보육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

○ 벤처기업의 경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

- 우수인력 공급을 위하여 우수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
- 대학 및 출연연구소가 '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'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연구결과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

2. 종합투자계획의 추진

□ 05년 BTL 사업 총한도액과 사업별 한도액을 국회에 제출(5.20)

* 05년 BTL 총 사업한도(국가·지자체) : 17개 분야, 128개 단위사업, 6조 1,969억원

- 국방부(충주비행장 5.11), 교육부(전북대·전주교대 기숙사 5.25), 환경부(강진군 5.31) 사업공고 등 부처별 선도사업을 추진
- BTL 사업에 금융기관과 일반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, 기존 민자사업 수준의 세제 혜택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

*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.26 국회제출, 금산법시행령 등 개정완료, 법인세법 시행령 6월중 개정

□ 민간자본 유치로 통해 도로건설을 조기에 추진

- 하반기중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운영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 증권(ABS)을 1조원 발행하여 고속도로 공사기간을 단축
- 현재 추진중인 2개 고속도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적기 완공을 추진(부산~울산, 무안~광주간 고속도로)

* 민간사업자(도로공사·국민연금 컨소시엄)와 실시협약 체결협상 시작(5.25)

- 민간제안 도로사업(BTO)의 조기 추진 : 10개 민간제안 도로사업 중 05년중 6개 사업 우선추진, 3개 사업 공고*

* ①평택~시흥, ②송현~불로, ③제2경인연결 : '05.5.10 제3차 제안공고

□ 사립학교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및 3개 사업* 추진

* 3개 사업 : 건국대, 경희대, 대전외국인유학생 기숙사(총사업비 1,023억원)

□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을 8곳으로부터 받아 하반기중 지정

□ 정부는 6월중 종합투자계획 진행상황을 점검·지원할 계획

3.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

□ 서민생활 안정과 신용불량자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한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(3.23)을 차질 없이 추진중

○ 4.1~6.13일간 총 32,793명이 채무재조정을 신청

* 5월 채무재조정 신청실적은 4월(12,667명)보다 증가한 13,041명

<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채무재조정 신청건수(명) >

	기초수급자	청년층	영세 자영업자	합계
4월	9,266	1,736	1,665	12,667
5월	10,400	1,365	1,276	13,041
6.1-13일	6,242	472	371	7,085
합계	25,908	3,573	3,312	32,793

○ 은행들은 영세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신규대출방안을 마련하여 운영중

- 특히, 조흥은행은 「사회연대은행」과 업무 제휴를 통해 약 400명의 영세자영업자에게 총 5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(6.3일)

* 사회연대은행(마이크로 크레딧 기관)은 대출업체 선정, 사후관리 담당

○ 다중 채무자 대상의 금융권 공동 추심 프로그램(5.16일 시행)은 채무 재조정을 원하는 채무자*에 대하여 활발하게 신용회복을 지원

* 채무재조정 신청자 수(5.16~6.13일): 23,618명

□ 보다 많은 채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

○ TV3사·전광판 광고(6월), 공익광고(7~8월) 등 홍보 효과가 큰 방송매체를 적극 활용

○ 기초수급자의 원활한 채무재조정 신청을 위해 전국 234개 시·군·구에서 순회접수(6월) 등

4.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

□ 추진 배경

- 당초 01.7~06.7월까지 에너지과소비 억제,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제1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중이었음
 - * 제1차 개편 목표 = 100 : 75 : 60(휘발유 : 경유 : LPG부탄 상대가격비)
- 05년 경유승용차 시판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에너지 상대가격을 국제수준으로 재조정하기로 함
- 이를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, 환경오염도, 연비, 국제수준 등을 감안하여
 - 05.7~07.7월까지 휘발유 : 경유 : LPG부탄의 소비자 가격비율을 100 : 85 : 50으로 조정하기로 결정
 - 이에 따라 경유는 향후 3년간 매년 7월 5%p씩 인상, LPG부탄은 05.7월 3%p 인하

(05.5) 100 : 70 : 53 ⇒ (05.7) 100 : 75 : 50 ⇒ (07.7) 100 : 85 : 50

□ 현황 및 향후 일정

- 최근 6개월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조정안을 확정하여 교통세법,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(05.5.26)
-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, 7월부터 시행 예정
 - * 버스, 택시, 화물차 등 운송업계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인상분 전액 유가보조금 지급
 - *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경유세율 인상분이 계약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중

5. 재정운용시스템의 혁신

□ 새로운 재정운용의 기본 틀 마련

- 단년도·통제 위주의 재정운영방식을 중장기·성과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 틀로서 국가재정법 제정을 추진
 - 복식부기·발생주의 정부회계 제도가 08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
 - 연내 정부회계법 제정과 정부회계기준 시안 확정을 추진하고, 06년부터는 시험운용 대상기관을 전부처로 확대*
- * 05.5월부터 12개 중앙관서를 대상으로 시험운용중
- 중기관점(3~5년)에서 국가채무 상환실적·계획, 향후전망 등을 담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(05.9월)

□ 정부계약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추진

- 최저가낙찰제의 덤핑방지기능 미흡 등 입찰제도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보증심사와 감리·감독도 강화
-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「정부계약제도 개선 T/F」를 구성·운영 중
 - ※ 아울러 정부계약관련 정보공개범위 확대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(7월중 시행 예정)

□ 조기 결산체제의 구축

- 정부결산을 조기에 국회에 제출(6월말-7월초)하여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가능토록 하고 예산과의 연계성을 제고
 - ※ 예산회계법상 제출기한은 9.2일

6. 금융허브 추진

□ 기본 방향

- 보다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발판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선도금융업종 주도의 발전전략을 추진(제1차 금융허브회의, 6.3일)

□ 추진 과제

- 외환제도, 금융규제, 금융감독 및 경영·생활환경 금융 인프라를 경쟁국 수준으로 확고하게 구축
 - 기존 "유입촉진·유출억제" 중심의 외환정책기조 완화
 - 해외투자활성화 조치와 기업활동관련 외환규제완화 연내시행
 - 자본시장 관련 법령의 통합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
- 선도 금융시장과 업종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후방효과를 통해 주식시장, 외환시장 등 타 금융 부문의 발전을 견인
 - * 선도금융시장 : 채권시장, 구조조정시장, 파생상품시장
 - * 선도금융업종 : 자산운용업, 투자은행, 사모투자펀드
- 국제금융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, 외국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
 - 국제금융계 유력인사로 국제 자문단을 구성하고, 외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IR 계획을 수립·시행
-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추진
 - 06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금융전문대학원을 선정하여 우수교수진 및 교육시설 확보를 위한 자금을 지원

별첨 : 6월 임시국회 상정예정 정부제출 법안

1. 교통세법·특별소비세법 (개정, 05. 5.26)

□ 개정 배경

- 당초 01.7~06.7월까지 에너지과소비 억제,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제1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 중이었음

* 제1차 개편 목표 = 100 : 75 : 60(휘발유 : 경유 : LPG부탄 상대가격비)

- 05년 경유승용차 시판에 따른 대기오염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에너지 상대가격을 국제수준으로 재조정하기로 함

□ 주요 내용

- 07.7월까지 휘발유, 경유, LPG부탄 소비자가격 비율을 100 : 85 : 50으로 조정

- 이를 위하여

-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 또는 특소세율을 2005.7부터 2007.7까지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

- LPG부탄에 대하여는 2005.7부터 특소세율을 인하

2. 조세특례제한법 (개정, 05. 5.26)

□ 개정 배경

-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고 민간자본의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하여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함

□ 주요 내용

-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
 -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
 - 개인투자자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 15% 소득공제
 -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벤처기업이 소득금액의 30%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손금 인정
 - 제3시장 벤처기업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
- BTL방식에 의하여 SOC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VAT 영세율 적용
- 인프라펀드(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)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
 - * 3억원 이하분 : 5%, 3억원 초과분 : 14%
-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시한을 05.6월말에서 07.12월말까지 2년6개월 연장

3. 소득세법·상속세및증여세법 (개정, 05. 5.26)

□ 개정 배경

- 05.1월에 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개정·시행으로 주택등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평가한 주택가격이 05.4.30에 공시
- 이에 따라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
 - 공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계산하도록 하기 위함

□ 주요 내용

- 주택 공시가격을 양도소득세 및 상속·증여세 과표로 사용

4. 교육세법 (개정, 05. 5.26)

□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

- 등유·중유등 유류의 특별소비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적용시한이 05.12.31만료되도록 되어 있으나
- 적용만료시한을 폐지하여 2006.1.1이후에도 계속하여 교육세를 부과